

외화채무 정부 지급보증 은행별 배분

산은 140억 · 우리銀 100억달러

이진우 박유연 기자 | 입력 : 2008.10.20 17:48:47 수정 : 2008.10.21 07:48:00

1000억달러 한도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이 은행별로 배분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은행들이 신청한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보증액을 배분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보증액을 배분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로 넘겼으며, 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외채무 범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금감원이 취합한 바에 따르면 은행 합계 720억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담보가 있는 외화채무와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산업은행이 115억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80억달러 선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 · 신한 · 외환은행은 각각 60억달러 전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채무를 기준으로 125% 안팎에서 지급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체적으로 720억달러 대비 125%, 즉 900억달러 전후 보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한도가 100억달러 정도 남는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액을 기준으로 +α(플러스 알파)를 더해 배분한 뒤 남는 부분은 추후 상황을 봐 가며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 보증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외화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액보다 많은 보증이 실시되면서 자금 여력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낙관하고 있다. 국가가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할 때는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여야가 별 이견 없이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합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증 수수료는 1% 전후 수준에서 단일 수수료로 책정될 예정이다. 영국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0.5%를 기준으로 은행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신용도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미국도 0.75% 단일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간 은행들이 과다한 외형 경쟁을 해 오면서 늘어난 대외채무를 국가가 보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 생긴 자금 여력이 기존 채무 상환을 연장하는 데 활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인수 ·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자금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자금 용도를 제한하고 용처에 대한 중간 · 사후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 박유연 기자]